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사업방향 180도 전환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글 · 신상진 |
국회의원
(前대한의사협회회장)

보건복지부 산하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라는 기관이 있다. 지난 6,70년대 이 협회의 주요사업내용은 산아제한에 대한 홍보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2002년부터 역할과 기능이 180도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여 현재는 어떻게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로 사업의 방향이 변하고 있다. 이 만큼 극적으로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정책개발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주요 저출산 정책은 첫째, 출산장려정책으로 인구정책 전환. 둘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 셋째,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넷째, 저출산대책기금 설치 및 범국민운동 실시 등이다. 우선 정부는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자 출산장려정책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했다. 196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 온 출산억제정책은 1996년 양적 인구조절정책에서 인구의 자질향상과 국민복지향상에 초점을 둔 '신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폐기됐다. 그리고 2004년 1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출산장려정책을 공식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는 인구정책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저출산 대응책은 선진국은 인구대체율 수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시작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저수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행하여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점. 둘째, 가족정책의 여성가족부 이관 등 저출산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조직개편. 셋째, 저출산의 원인이 된 사회문화적인 대책 등 핵심은 비켜간 채 단기정책에 치중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 심각성 인식, 코페르니쿠스적 방안 마련돼야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보건복지정책으로만은 한계가 있다. 이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출산율을 높으려면 양육 및 교육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양육 및 교육비의 일부 부담은 목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육 부담에 대해서 국가 및 사회가 상당부분 책임을 떠맡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공교육에 한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파격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적 연대가 강화되고 공동체 문화가 발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출산과 보육, 교육은 개인이나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자발적인 집단과 조직, 다양한 봉사활동 단체로 이루어진 사회는 대체적으로 합계출산율도 덩달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발등의 불 '고령화 사회' 대비해야

우리사회의 더 큰 걱정거리는 급격한 고령사회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평균수명은 이미 선진국 평균을 넘어섰으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저출산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에는 14% 이상인 '고령사회', 201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UN 인구 전망에서도 205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3%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특별추계(2005.1)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율이 7%(고령화사회)에서 14%(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8년이며, 14%에서 20%(초고령사회)는 8년에 불과한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추계 결과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11)와 비교해볼 때 고령사회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년이나 단축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청·장년층의 인구감소와 저축 및 투자감소라는 '고령화의 덩어리'에 걸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의 4~5%에서 2030년에는 2%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

다. 고령화사회는 무엇보다 경제의 역동성에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하며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을 붓는 생산인구는 줄고 타가는 노인층 인구는 급증하는 '연금위기'와 재정위기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50년 뒤,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연금지급액은 약23배로 급증하나 연금보험료 수입은 6배로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퇴직 후 사망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인실업'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고령사회 정책대응 없인 우리사회 희망 없어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리고 국가 재정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건 및 의료, 연금, 노동, 사회복지서비스, 가족복지 등 노인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제도의 균형적 발전과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가족 및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정부가 주체가 되어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의 인구고령화 대응 방안의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교훈 삼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의료비와 연금분 및 가족복지정책 중 일부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와 가족복지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강한 가족주의를 바탕한 가족의 보호 및 양육기능을 보완하는 제도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저출산추세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우려와 수많은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대책 수립 및 시행이 매우 늦을 뿐더러 단기적인 고령화 대책에 치중하는 등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문제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노력과 함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저출산 추세와 인구 고령화에 걸맞는 21세기 미래 의학발전에도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가올 우리들의 미래는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수립과 시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KHA**